

마을기업지원법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69
----------	------

발의연월일 : 2024. 9. 26 .

발 의 자 : 이성권 · 안철수 · 조승환
이헌승 · 주진우 · 안상훈
조지연 · 강승규 · 김소희
김용태 · 강명구 · 김 건
의원(12인)

제안이유

마을기업은 지역에 존재하는 유형과 무형의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2010년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 후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되었음.

2023년 12월 기준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12,265명의 고용, 3,09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과를 내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은 근거법령을 두고 있으나, 마을기업은 근거법령이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법령을 제정하여, 지역의 뿌리경제로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마을기업의 순

기능을 확대하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지역공동체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마을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유·무형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그 마을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사업체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기업을 말함(안 제2조제1호).
- 다. 국가는 마을기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마을기업은 수익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마을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함(안 제4조).
- 마.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도별 지원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과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8조제1항).

- 바.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각 마을기업지원위원회 시·도별 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 사. 마을기업은 유·무형의 인적·물적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사업,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 사업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 아. 국가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제1항).
- 자. 시·도지사는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5인 이상 참여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 등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예비마을기업이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안 제14조).
- 차. 행정안전부장관은 청년구성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을 청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출자자수 요건의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15조).
- 카.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8조 및 제19조).

마을기업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공동체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마을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유·무형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그 마을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사업체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기업을 말한다.
2. “마을주민”이란 마을기업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되는 자로서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읍·면·동의 동일한 생활권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청년마을기업”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주도하여 설립한 마을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청년마을

기업을 말한다.

4. “예비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단체 등으로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마을기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마을기업의 역할과 의무) 마을기업은 수익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마을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추진체계

제6조(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
3. 마을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4. 마을기업 인력양성 및 대표자와 구성원 교육 계획
5. 마을기업지원기관 등 지원체계 구축
6. 그 밖에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도별 마을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시·도별 지원계획(이하 “시·도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도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시·도별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3. 마을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4. 시·도별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분석

5. 시·도별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시·도별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

7.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시·도별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관할 시·도에 소재하는 마을기업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도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도별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과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마을기업지원위원회) ①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마을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을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마을기업의 사업에 관한 평가·관리
3.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우수 마을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도별 마을기업지원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별 지원 계획과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의 지원시책 등의 심의 등을 위하여 시·도에 시·도별 마을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별 마을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1조(마을기업의 사업) 마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유·무형의 인적·물적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사업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3.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
4.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 사업
5. 그 밖에 마을기업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마을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받는 기업·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마을주민이 대표자 및 구성원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수·출자비율·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을 충족할 것
3.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4.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
5. 지역의 소득·일자리창출 기여, 지역자원의 활용, 사업계획의 적

합성·공공성·지역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그 밖에 마을기업의 신청·심사·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기준·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2. 전문인력의 육성 및 마을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시설비 등의 지원·용자
4. 부지구입 용자
5.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6. 마을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7.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9. 그 밖에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마을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예비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5인 이상 참여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 등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과 사업 이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비마을기업이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이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청년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년구성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을 청년마을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마을기업에 대하여 출자자수 요건의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마을기업의 날) ① 국가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

고, 마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마을기업의 날로 하고, 마을기업의 날부터 1주일을 마을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그 밖에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마을기업 지원 기반조성

제18조(마을기업지원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지원센터(이

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마을기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3. 마을기업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4. 마을기업 사업자 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운영
5.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민간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 조정
6. 마을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부설 기관 운영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마을기업 관련 사업
8. 그 밖에 마을기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
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마을기업지원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는 마을기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된 관할 지역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자원의 조사 및 사업의 발굴
2. 마을기업과 주민 간의 연계협력
3. 마을기업과 지역에 소재한 기업, 기관, 법인, 단체와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4. 마을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마을기업에 관한 주민 교육 및 홍보
6. 마을기업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7. 마을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 및 홍보
8. 그 밖에 마을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현황이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마을기업에 대하여 사업·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기업의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약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마을기업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검사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 및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과 마을기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마을기업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2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마을기업이 아닌 자는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을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개선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23조를 위반하여 마을기업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으로 본다.

제3조(마을기업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지원기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